

양육 자조금

그 배는 어디로 가는가!

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가축악성전염병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어 국내도 안 전지대는 아니다. 여기에 축산물 시장 개방화 시대를 맞은 특수 가축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축산 의무자조금 사업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 할 수 있는 정보제공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폐업 농가 늘어 가는 양육업 살 길 없나

양육 산업은 몇 해 전부터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에 있지만 가격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육인들의 경영 여건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소비자들은 아직도 국산 녹용의 우수성에 대해 인식도가 낮은 편이어서 소비자들을 설득 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보다 조직적인 소비 홍보가 뒤따라야 할 입장이다.

2003년 말 현재 사슴사육두수는 총 144,926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에 비해 약 6%정도 감소했으며, 2004년 실제 사육 수 역시 비슷한 추이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가 수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해 2004년의 농가수도 경영난이 심화된 탓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50두 이상 전업규모 농가 비율은 5% 이내에서 크게 증감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농가 당 사육두수는 2002년 12.4두에서

2003년 12.6두로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 소규모 농가의 폐업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축산물 안전성이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의 가시적인 조치와 유통 투명화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축산 의무자조금 사업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2002년 5월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축산 의무자조금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양돈 의무자조금으로 2004년 4월부터 농가가 출하하는 비육돈 1마리당 400원씩을 거출하고 있다.

자조금은 각 농가의 기대와 믿음의 결의를 통해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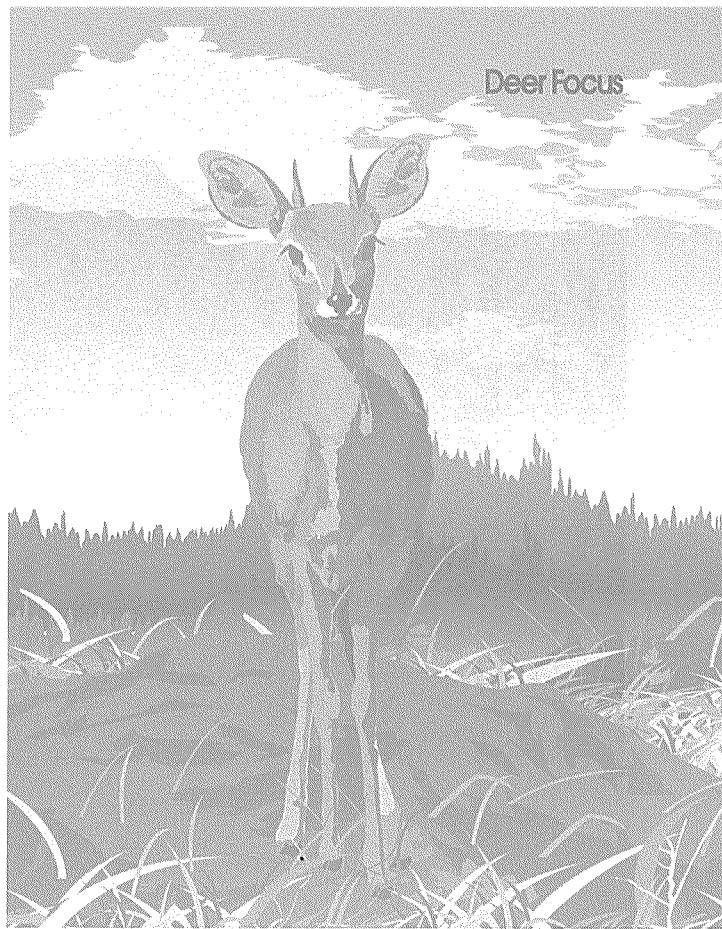
지난해 5월 1일은 전국 도축장에서 한우 자조금 거출이 일제히 시작됐다. 당초 한우농가 자조금 의향조사에서 도입 자체가 불투명할 것이라던 우려를 한 순간에 날리는 쾌거를 기록했다. 그만큼 한우 인들이 한우 자조금에 거는 기대감이 높음을 반증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우 자조금 거출이 시작되면서 농가의 인식부족, 중간상인의 납부거부, 도축장의 소극적인 수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무임 승차자 문제가 성공안착의 걸림돌로 등장하면서 지역별 거출실적 편차 해소는 한우자조금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우 자조금 거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창기인 점을 감안해 소비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배정하는 것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조금에 대해 한우 농가를 이해시키는 홍보, 도축장과 중간상인 대상의 거출협조, 유통투명화 등 효율적인 자조금 활용 방안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무자조금의 전 축종 도입은 축종 간 경쟁을 과 함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 실직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선 축산물 소비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축산 의무자조금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처음으로 도입한 양돈업계는 올해로 의무자조금 3년째를 맞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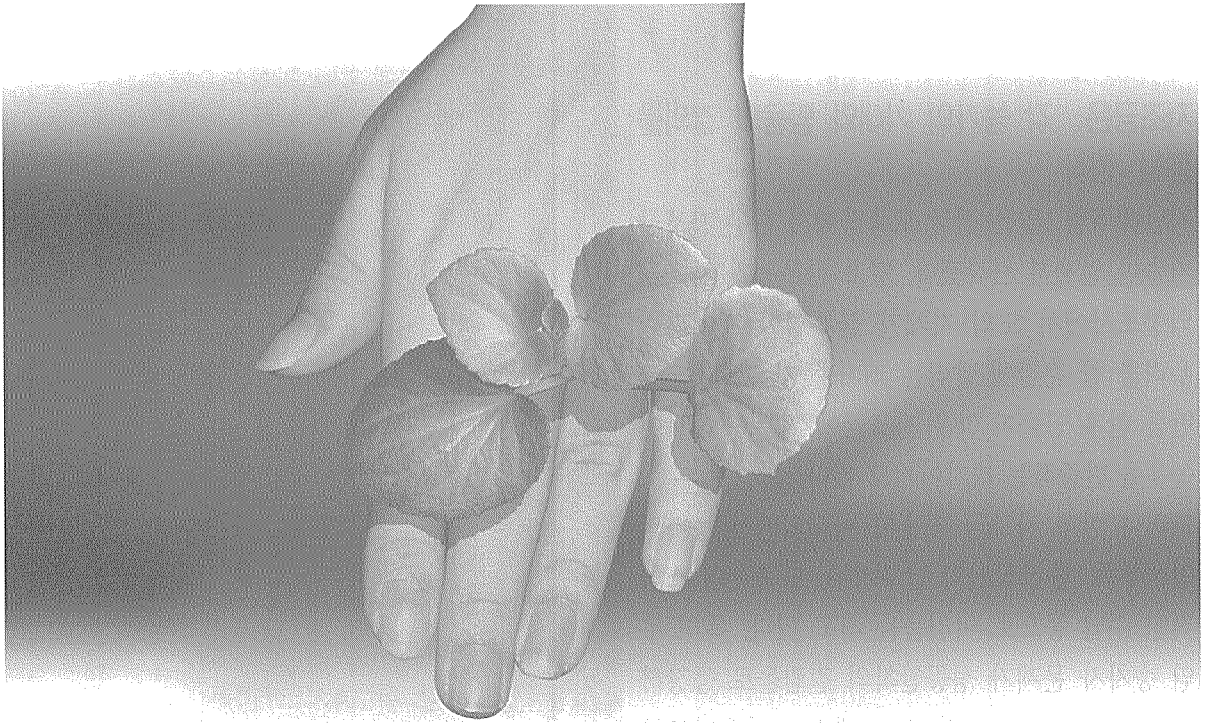


의무자조금을 통해 소비홍보 분야를 중점적으로 공략한 결과 일본수출 중단 이후 소비부진으로 적체된 등심, 안심, 뒷다리 살 등 이른바 저지방부위의 소비확대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양돈 자조금을 통해 '양돈 산업은 양돈인 스스로 지킨다'는 공감대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 향후 거출금 운영을 누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 의무자조금 시행은 양육 산업 발전을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양육인 스스로 나서서 선진된 제도이다.

그렇지만 의무 자조금을 결정하느냐, 마느냐는 양육인의 굳은 의지에 달려있다.

아울러 일선 도축장의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한 자조금의 미납부문에 대한 거출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축장이 부도나 도산으로 폐업 후 경매과정을 통해 새롭게 영업을 시작해도 미납된 자조금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부실로 인해 제3자가 도축장을 인수할 경우 미납된 자조금이 승계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함께 양돈자조금 대의원회 규정의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다시 말해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양돈 자조금이 양돈농가들인 대의원들에 의해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낙농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거가 지난해 11월 31일과 12월 1일 양일에 걸쳐 150명 전원이 선출되며 성공리에 치러졌다. 이미 1999년 이후 임의형태로 매년 21~34억원의 사업을 진행해온 바 있는 낙농부문은 의무자조금 도입에 있어서도 가장 수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

고 있다.

다만 거출금의 운영에 대해 관련 양 단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당초 기대만큼 수월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 향후 거출금 운영을 누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낙농가들의 협조 없이는 자조금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농가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관련 업계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사업경험을 거울삼아 학교급식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대책이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홍보와 수급조절을 위해 쓰일 의무자조금 사업이 도입에 난 항을 겪고 있다. 닭고기는 지난해 10월 150명 대의원 가운데 135명을 선거를 통해 선출했으나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채란부문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

한 선거조차 치루지 못했다.

또 산업주체가 십시일반으로 조성하는 재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육계부문의 경우 계열업체와 농가가 각각 거출금을 몇 퍼센트씩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

농가가 병아리와 사료 등 제반자재를 업체로부터 구입해 다 자란 닭으로 되팔거나 위탁사육수수료를 받는 닭 계열화사업의 특성상 농가가 내는 돈보다 계열업체가 내는 돈이 많아야 한다는 게 대의원 농가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계열업체의 경우 업체마다 입장이 달라 농가 거출금의 일부도 낼 수 없다는 곳부터 상당부분 부담할 수 있다는 곳까지 있는 등 대의원 농가와 업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육 산업의 자조금 정책!

양육인의 굳은 의지가 자조금 정착을 결정한다.

양육 산업의 문제점 중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은 매년 농가 소득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을 해소 시켜야 하는 일이다. 과거에 비해 녹용 판매 수입도 감소하는 형편이고,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도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사육비 상승에 비해 농가 수입은 감소하는 형편이라 더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소비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약재 수입녹용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내산 녹용으로 대체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내산 녹용은 건강식품과 관련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30%이내에

머물고 있어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지 않는다면 수입녹용으로 인해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다각적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의 의무자조금 도입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양육 산업 발전을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양육인 스스로 나서는 선진된 제도이다. 산업면에서 우리보다 앞섰다는 미국도 축산업 자조금이 정착되는 것이 1990년대나 가능했고 일본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임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의무자조금제도가 뿌리를 내리기는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말로는 쉬워도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자조금을 결정하느냐, 마느냐는 양육인의 굳은 의지에 달려 있다. 농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밀려오는 저질 가짜 녹용을 막아줄 대안이 없다면, 의무 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스스로 나서지 않을 수 없고 스스로 나서려면 비용이 들고 비용은 스스로 각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조금 제도의 채택 여부는 양육인의 선택 문제가 산업의 경쟁력이 달린 중요한 제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